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 순환의 특징

- 성장 복원력이 약화되고 경기 변동성이 높아진 국내 경제

1. 외환위기 이후 경기 변동의 특징

(1) 성장 복원력 약화 : 최장기 하강 국면 지속

○ 2000년 8월 경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 최장기 경기 수축 국면을 지속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기 사이클의 특징인 확장 기간이 수축 기간보다 긴 경기 사이클 구조가 붕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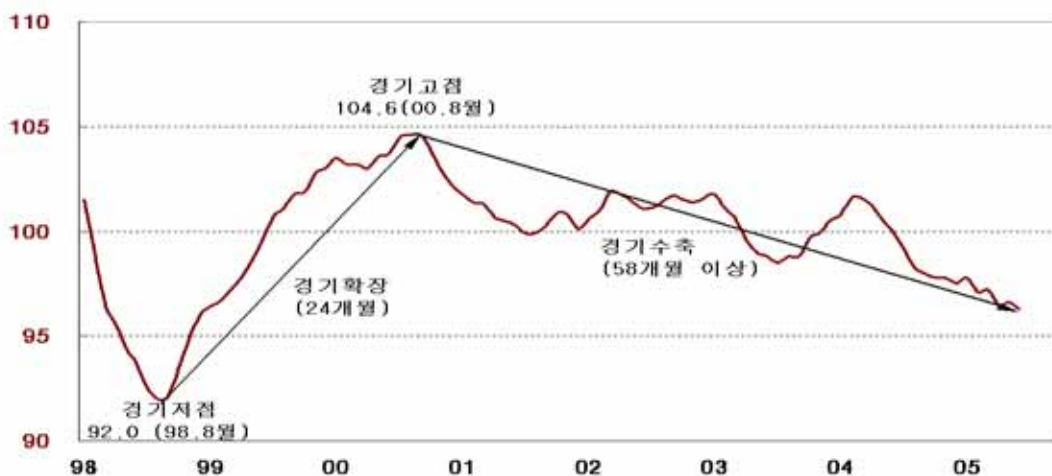
- 현재 한국 경제는 1970년 이후 제 7 순환기 경기 수축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 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

· 이번 7 순환기의 확장 기간은 24개월에 불과한 데 반하여, 경기 수축 기간이 5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최장기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으나, 아직 경기 공식적으로는 경기 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수축 기간이 확장 기간보다 두 배 이상(2.4배) 긴 비정상적 경기 구조가 형성되어 한국 경기 사이클의 특징이 붕괴됨

· 1~6 순환기의 평균 주기는 53개월(확장 기간 평균은 34개월, 수축 기간 평균은 19개월)로 확장 기간이 수축 기간보다 약 1.8배 긴 비대칭적 구조임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2) 경기 변동성 확대 : 경기 안정성 약화

○ 성장률 등락폭으로 평가되는 경기 변동성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외환 위기 이후 다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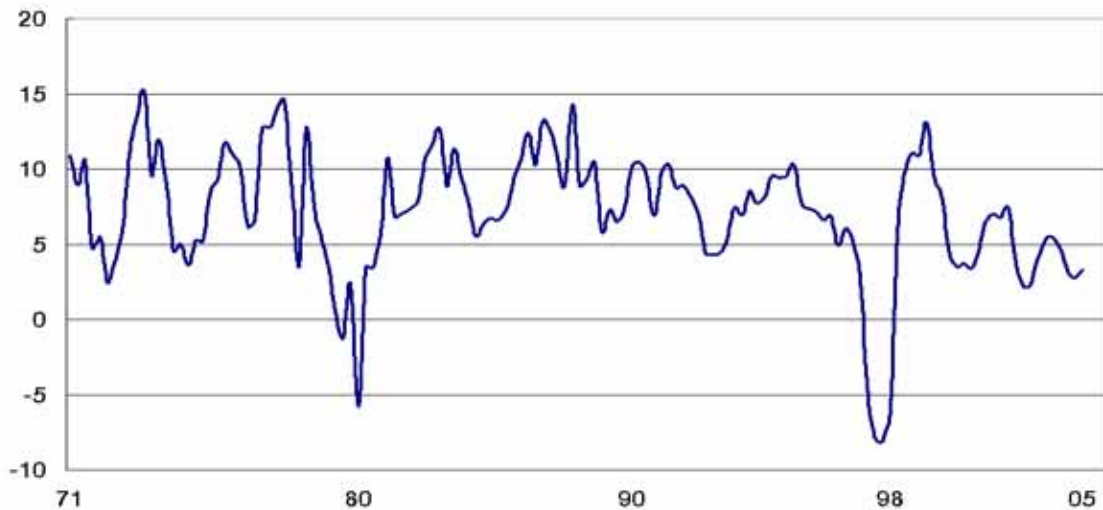
- 1971~80년 기간의 분기별 GDP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4.63이었으나, 80년대 2.57, 1991~97년에 2.00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표준편차는 2.98로 이전 기간인 1991~97년의 2.00보다 오히려 확대됨

개도국에서 선진 경제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① 거시 경제 측면에서 내수 비중의 확대, ② 산업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 ③ 정부의 경기조절능력 향상 등으로 경기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실질 GDP 증가율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전기간	1971~80	1981~90	1991~97	1999~2005
평균	7.1	7.5	8.8	7.3	5.9
표준편차	4.16	4.63	2.57	2.00	2.98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005년은 2/4분기까지이며, 표안의 표준편차는 증가율 기준임

2)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은 분석 기간에서 제외함.

○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 붕괴) 수요 부문별로 보면 소비의 변동성은 경제성장률(소득)의 변동성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외환 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오히려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소득의 변동성을 상회함

- 한국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소득의 변동성(GDP 증가율의 표준편차)보다 소비의 변동성(총소비 증가율의 표준편차)이 높아, 소비 부문이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정형화된 사실이 붕괴
 - 총소비 증가율의 표준 편차는 1970년대 이후 약 2내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 위기 이후 4.08로 급증
 - 이에 따라 1999~2005년의 기간에 총소비 증가율의 표준편차가 오히려 GDP 증가율의 표준편차(2.9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는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상실되어, 결국 이 기간동안 소비는 투자나 수출 부문처럼 전체 변동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원래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상실함

○ (수출 변동성의 확대) 한편 수출 부문의 변동성도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됨

- 70년대 20.78에 달했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증가율 표준편차는 80년대 9.88, 91~97년 6.80으로 낮아졌으나, 1999~2005년에는 9.53으로 급상승함

< 지출항목별 증가율의 변동성 (표준편차) 추이 >

	전기간	1971~80	1981~90	1991~97	1999~2005
GDP	4.16	4.63	2.57	2.00	2.98
총소비	3.91	2.17	1.68	2.00	4.08
총고정투자	13.85	19.34	8.55	7.51	6.13
건설투자	14.76	21.98	11.37	5.87	5.34
설비투자	23.50	31.55	10.44	13.65	20.44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4.07	20.78	9.88	6.80	9.53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분기별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이며, 2005년은 2/4분기까지임
 2)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은 분석 기간에서 제외함.

- (서비스업의 경기 안정 기능 상실) 산업별로 보면 국내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되어 외환 위기 이후 전체 경제의 변동성을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함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70년대 2.93에서 80년대 2.11, 1991~97년에 1.57로 낮아졌으나, 1999~2005년에 3.16으로 크게 확대됨
 - 이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에 GDP 증가율보다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며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하였던 서비스 부문이, 1999~2005년에는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제조업 부문의 변동성 확대) 특히 외환위기 이전까지 제조업 부문의 생산 변동성은 축소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의 정보화 기술 도입, 재고 관리 능력 향상, 안정적인 국내 수요 비중 확대 등으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1999~2005년의 기간에 제조업 생산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7.87로 1991~97년의 3.67은 물론 80년대의 6.17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

< 생산활동별 주요 항목 증가율의 변동성 (표준편차) 추이 >

	전기간	1971~80	1981~90	1991~97	1999~2005
GDP	4.16	4.63	2.57	2.00	2.98
농업, 임업 및 어업	8.73	11.94	7.51	7.77	4.95
광업	9.09	10.54	7.96	6.36	5.08
제조업	8.85	10.39	6.17	3.67	7.87
건설업	14.75	22.60	10.53	5.70	6.19
서비스업	3.40	2.93	2.11	1.57	3.16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분기별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 대한 표준편차이며, 2005년 2/4분기까지임
- 2)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만을 포함
- 3)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은 분석 기간에서 제외함.

2. 국내 경기 변동 구조 변화의 원인

(1) 개요

- 외환 위기 이후 성장력 복원력 약화와 경기 변동성 확대라는 국내 경기 변동 구조의 변화는 대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 취약한 경제 구조, 잘못된 정책 대응이 복합된 결과로 판단됨
 -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급성장, 고유가 시대의 고착, 대외 돌발 악재의 발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등의 대외 충격이 발생하여, 외환 위기 이후 외수에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한국 경제의 성장력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증대시킴
 - 한편 높은 대외의존도, 내외수 단절,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대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성장력 약화와 변동성 증대가 심화됨
 - 여기에 과도한 소비자 신용 확대 정책, 국내 기업 규제 개선 미흡과 차세대 산업의 발굴과 투자 저조, 저금리 정책 등으로 인한 시중 부동 자금 증대와 부동산 시장 대책 실패와 같은 정책적 요인이 국내 경기 변동 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가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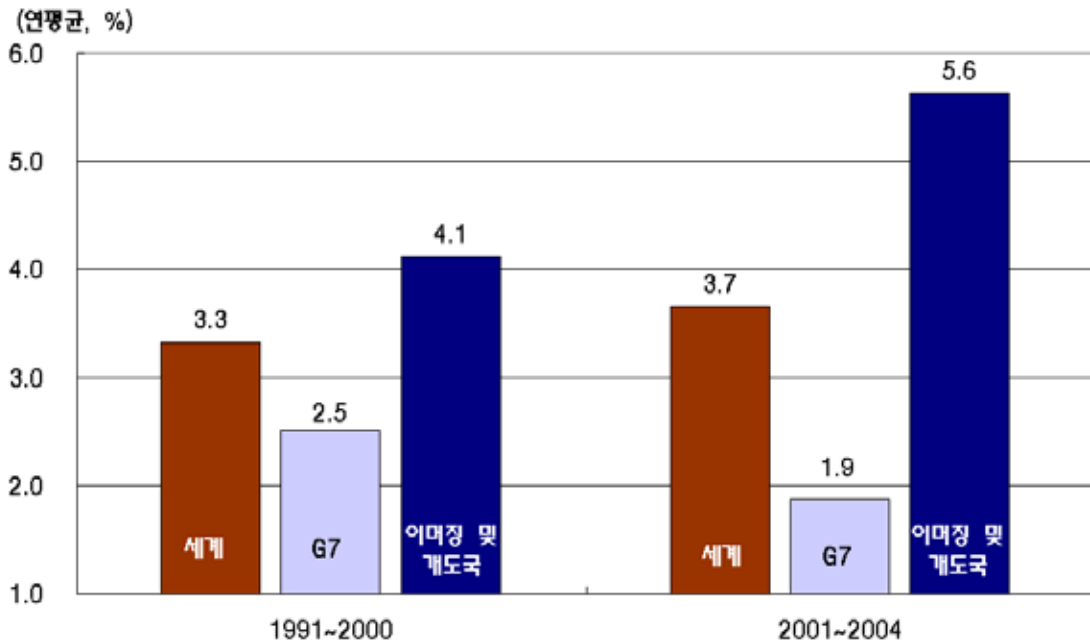
< 국내 경기 변동 구조 변화의 원인 >

	성장력 약화의 원인	변동성 확대의 원인
대외 여건	- 선진 경제의 저성장 -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 중국 등 신흥 개도국 고성장 - 국제 금융 시장 불안 - 대외 돌발 악재의 빈번한 발발
대내 여건	- 내외수 단절 - 비효율적 경제 구조	- 높은 대외 의존도
정책 여건	- 투자 규제 완화 미흡 - 차세대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미흡	- 소비자 신용 확대 정책 - 저금리 기조에 의한 부동자금 증대 - 부동산 시장 대책 효과 미약

(2) 대외 경제 여건

-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 구조 변화(선진 경제의 저성장,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고성장),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대외 돌발 악재의 빈번한 발발 등 대외 여건의 급속한 악화가 국내 경제의 성장 복원력 약화와 경기 변동성 심화의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함
- (세계 성장 구조의 변화) 21세기 들어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된 반면, 신흥 개도국들은 고성장을 지속함
 - 선진 경제의 성장률 저하 : 1991~2000년 G7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에 달하였으나, 2001~2004년에는 1.9%로 하락함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Database.
 주 : 기간중 연평균 자료임.

-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외수 주도형 경제인 일본 장기 불황 지속, 미국의 IT 버블 붕괴, 경제 통합 과정에 따르는 EU 내의 혼란 등의 요인들이 복합되었기 때문임
- 특히 90년대 한국 수출 대상 지역중 1위(연평균 수출 비중 20.4%)를 기록 하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2.5%로 하락함

< 참고 > G7국가들의 경기 부진

- IMF가 측정한 GDP 갭(gap)률¹⁾을 기준으로 할 때 G7국가들의 현재의 경제 상태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 부진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G7국가의 GDP갭률 : +2.4% ('00) → -1.4% ('02) → -2.0% ('03) → -1.2% ('04) → -0.9% ('06E)

- **신흥 개도국들의 고성장 지속** : 반면 중국 등 이머징 마켓 (Emerging Market) 과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5.6%로 증가함
- 90년대 10.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중국은 2000년대에도 WTO 가입에 따르는 수출 증대 효과로 8.7%의 고성장을 유지함
- 또한 인도, 러시아, CIS 국가들의 경우에도 90년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2001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지속중임

< 주요 이머징/개도국 경제성장률 추이 >

	중국	인도	러시아	CIS(러시아 제외)
1991~2000	10.1%	5.6%	-3.5%	-3.8%
2001~2004	8.7%	6.0%	6.1%	8.4%

자료: IMF.

주: 러시아 및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1992~2000년 기준임.

1) GDP 갭률이란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수치가 陽의 값이면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를 나타낸 것임. $GDP\text{ 갭률} = \left(\frac{\text{실제}GDP}{\text{잠재}GDP} - 1 \right)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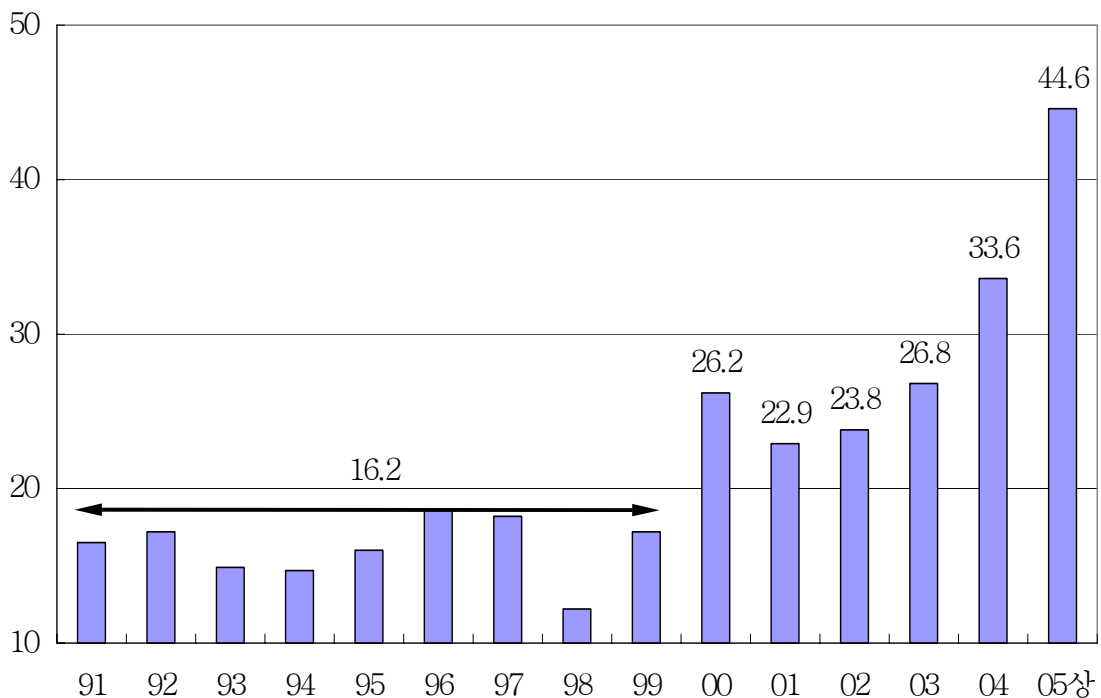
○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세계 경제가 2000년을 기준으로 저유가 시대를 마감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대되고 성장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짐

- 1991~99년 배럴당 연평균 16.2달러에 머물렀던 국제 유가는 2000년 들어 20달러대로 진입하였으며, 2004년에 33.6달러, 2005년 상반기에는 44.6달러 (전년 대비 11달러 상승) 로 급상승함

- IMF는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상승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 0.3%p 하락을 전망
 · ADB(아시아개발은행)도 2005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아시아 경제성장률이 0.8%p 저하될 것으로 예상

< 국제 유가 (Dubai 가격 기준) 추이 >

(단위: 달러/배럴)



자료: 대한석유공사.

- (국제 금융 시장 불안)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세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처 부재, 중국의 고성장,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함
 - 90년대 미국은 튼튼한 경제 펀더멘틀에 기초한 강달러-고금리 정책으로 국제 자본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비교적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은 크지 않았음
 -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신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미국 경제가 급락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으로 집중되었던 국제 자본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약달러, 저금리, 주가 하락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해짐

- (돌발 악재의 빈번한 발발)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와 이후 이어진 미국의 對 테러 전쟁, 중국의 SARS, 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등 대외 돌발 악재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미국의 '對 테러 전쟁'의 일련의 과정으로 9·11 테러 (2001년), 미-아프가니스탄 전쟁 (2002년), 미-이라크전쟁 (2003년) 등이 발생하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SARS (2003년), 동남아의 쓰나미 (2004년) 등의 돌발 악재들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함

(3) 대내 경제 여건

- 높은 대외의존도, 내외수 단절,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유가 시대의 진입 등 대외 부정적 여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함
- (높은 대외의존도) 높은 무역의존도 및 과도한 에너지 의존도와 같은 대외취약성으로 해외 수요나 국제 유가 급변동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함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1년 60.5%에서 2004년에는 70.3%로 급증하여 사상 처음 70%를 돌파함
 - 한국의 무역의존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19.5%), 일본(21.9%)보다 훨씬 높을뿐더러, 외국인 투자에 의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7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 결과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해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됨

< 무역의존도 추이 >

(단위: %)

	2001	2002	2003	2004
무역의존도	60.5	57.5	61.3	70.3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 : 무역의존도 = (수출+수입) / 명목GDP.

- 부존자원의 희소,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으로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가 지속
 - 경제의 에너지 탄성치 (에너지소비증가율/GDP증가율)는 2000년대 0.77로 70년대의 0.87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임

< 에너지 탄성치 추이 >

(단위: %)

	1971~80	1981~90	1991~2000	2001~04
에너지탄성치	0.87	0.88	1.37	0.77

자료 : 산업자원부.

· 특히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경제의 석유 의존성 지수²⁾는 세계 평균인 1.0을 크게 상회하는 1.35이며, 스위스 (0.35), 미국 (0.93)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일본 (0.48)과 대만 (1.05) 보다도 높은 수치임

○ (내외수 단절) 수입유발형 경제 구조로 수출 호조가 내수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침

- 수입유발형 경제 구조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큰 수입의존적 산업 구조가 내외수 단절 현상을 유발함
 - 최종 수요의 수입유발계수 (최종 수요 한 단위당 수입 유발 효과)는 90년 0.245, 95년 0.254, 2000년 0.286으로 계속 높아졌으며, 특히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2000년 0.367로 최종 수요 전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내외수 경기 역전(양극화) : 경제 성장에 대한 내수 부문의 기여율은 90년대 연평균 117.2%에 달하였으나, 2001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6.4% 및 32.9%에 머물고 있음

< 내수 및 외수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 추이 >

(단위: %)

	1991~2000	2001	2002	2003	2004
내수 기여율	117.2	84.3	97.6	16.4	32.9
외수 기여율	-17.4	11.9	-3.1	82.1	73.1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내수는 국민계정상 총소비 및 총투자이며, 외수는 수출과 수입의 차를 의미함

2) 내외수 기여율의 숨은 통계상 불일치 항목으로 인하여 100이 아닐 수도 있음.

○ (비효율적 경제 구조)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음에도 여전히 비효율성이 상존

- 경제 사회 시스템의 낙후로 경제 사회 제도의 생산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80년대 초반 2.1%에서 90년대 후반 1.1%로 급락함³⁾

2)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가 주요 60여개국을 대상으로 GDP 10억 달러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석유량을 지수화하여 매년 발표.

3)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혁신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이외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도로 그 개념을 확장시킴.

(4) 정책 여건 : 경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외 충격을 증폭

○ 외환 위기 이후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그 부작용으로 경기 변동성 급증과 경기 급락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치유하는 데에도 정책 강도가 미흡하여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에 이루어진 경기부양책이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기업의 투자 규제로 성장 기반이 크게 약화됨
- 또한 現 정부도 이전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인 소비 침체와 부동산 투기 현상을 수습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성장 저하의 근본 원인인 기업 투자 부진 현상을 방치하여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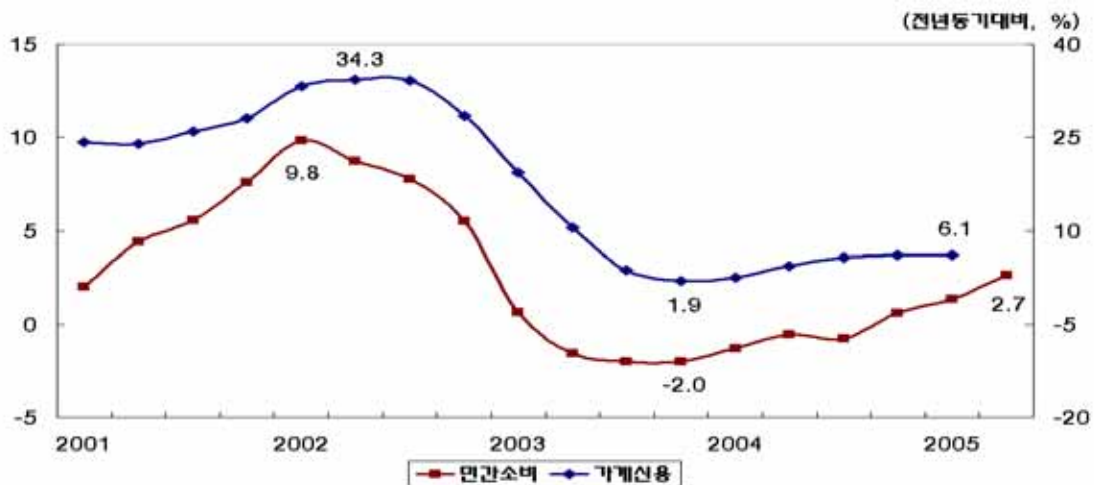
① 소비 시스템의 붕괴 : 경제 안전판 훼손

○ (現 내수 침체의 근본적 책임은 소비자 신용 확대 정책) 가계의 소득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소비자 신용 확대 정책이 소비 변동성 심화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유발함

○ (발단)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의 진입 장벽 완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

- 이에 따라 가계 신용은 2001년 2/4분기 3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신용 확대에 힘입어 200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7.0%를 훨씬 상회하는 9.8%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역할을 함

< 민간소비 및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결과) 그러나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한 소비자 신용 확대 정책이 결국에는 소비 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변동성 확대와 장기 침체를 유발함
 -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지속으로 민간 소비 여력의 핵심인 근로소득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여 채무 불이행이 만연되고, 결국 2003년에 들어서 소비 버블이 붕괴되며 신용 시스템이 크게 훼손됨
 - 이러한 소비 부문의 비정상적인 흐름은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1999년 이후의 소비 변동성을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소득보다 소비의 변동성이 더 높은 결과를 초래함⁴⁾
 - 2002년의 경제성장률 급상승과 2003년 이후의 성장률 급락에는 소비 부문의 버블 형성과 붕괴가 주된 원인임
 - 2002년 연간 경제성장률 7.0%중 총소비의 기여율은 72.3% (즉 7.0%의 경제성장률중 5.1%p가 소비로부터 유발)에 달함
 - 반면 소비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2003년의 경우 총소비 기여율은 -7.1%로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잠식함

< 총소비 증가율 및 성장 기여율 추이 >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3.8	7.0	3.1	4.6
총소비증가율	4.9	7.6	-0.3	0.2
총소비기여율	84.6	72.3	-7.1	2.2

자료: 한국은행.

4) 경제 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 변화를 항상 소득 (Permanent Income)의 변화로 인식하지 않는 한 이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소득의 변동성보다 소비의 변동성이 작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는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미흡한 정책 대응) 한편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 대책, 조세 감면책 등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형식적인 데에 그쳐 소비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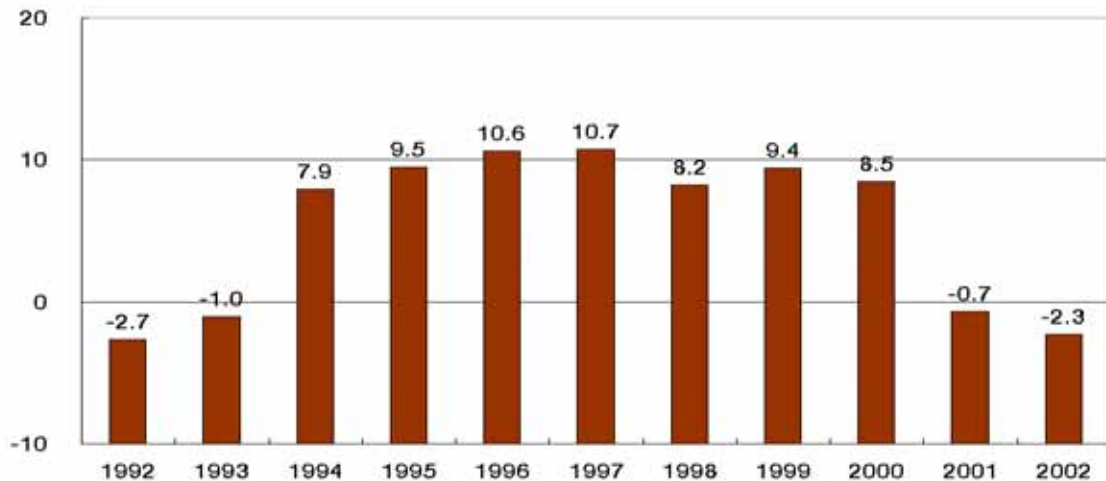
- 올해 상반기중 4대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 대한 신청자 수는 약 23만 1,772명⁵⁾으로 이는 2004년말 기준 361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약 6%에 불과⁶⁾
- 또한 2003년말부터 시행된 소득세율 인하, 특소세 폐지 등의 조세 감면책에도 불구하고, 2004년 소득세 초과 징수율이 6.5% (근로소득세는 18.9%, 1조 5,000억 원)에 달함

② 투자 환경 조성 미흡 : 성장 잠재력 훼손

○ (발단) 2000년대 초 세계적인 불황에 따르는 투자처 부재와 더불어, 국내 기업 규제가 설비투자를 침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OECD 국가들의 주요 부문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단위: %)



자료 : OECD.

주 : 1) OECD 회원국 중 자료가 존재하는 21개국의 평균치임.

2) 설비투자는 금속 기계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및 운송 장비 (Transport equipment) 기준임.

5) 2005년 상반기 4대 신용불량자 구제 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자 규모는 ① 2차 배드뱅크(자산관리공사 등) : 8만 2,984명, ②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11만 3,673명, ③ 개인회생(법원) : 2만 1,184명, ④ 개인파산(법원) : 1만 3,931명으로 총 23만 1,772명임.

6) 유의할 점은 ① 신용불량자의 해제 요건이 신청 기준이 아닌 각 지원제도 상의 심사를 거친 승인, 확정, 인가, 면책결정 기준이고, ② 제도가 아닌 자력을 통한 신용불량자 탈피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불량자 수가 신청자 수만큼 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음.

- 2000년을 기점으로 신경제 시대가 마감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주요 부문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 8.5%에서 2001년 -0.7%로 하락 (한국은 같은 기간 33.6%에서 -9.0%로 급락)한 것이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특히 90년대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IT 산업에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 하여 선진국들의 동반 투자 부진을 유발함

- 한편 국내적으로도 98년 초에 폐지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외환 위기를 계기로 다시 부활하는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 환경이 악화됨
 - 이외에도 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의 다양한 투자 규제가 지속됨

○ (결과)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투자가 정체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됨

- 해외순투자/국내설비투자 비율은 1991~1997년 연평균 3.9%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3년에는 6.9%로 크게 증가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직전인 1996년의 실질 설비투자 규모는 77.8조 원으로 GDP의 15.6%를 차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평균 65.2조 원, GDP의 10.8%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락함
 - 설비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90년대 +23.1%에서 2000년대 -3.4%로 급락

○ (미흡한 정책 대응) 현 정부 들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 등 핵심 투자 규제 요인들이 지속되어, 투자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의 대 GDP 비중 추이 >

(단위: 조 원)

	설비투자 (실질)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
1996	77.8	15.6%
1997	70.3	13.4%
1998~2004	65.2	10.8%
2005 上	38.4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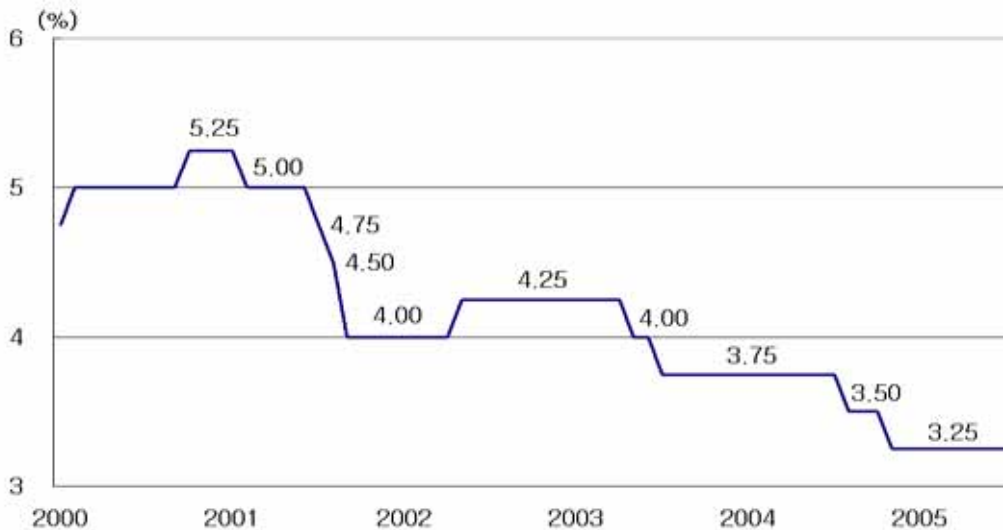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③ 저금리 정책 : 단기부동 자금 증대

○ 내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시중 부동 자금이 급증함

- 2001년 1월에 5.25%이었던 정책 금리(콜금리 목표 수준)는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04년 11월 3.25%로 2.0%p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금리 변동 없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수준 변경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2004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4%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시중 단기부동자금은 2004년 하반기 이후 5~6%로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05년 1/4분기 현재 414조 원에 달함

< 단기부동자금 추이 >

(단위: 조 원, 전년동기대비 %)

	2003		2004				2005
	3/4	4/4	1/4	2/4	3/4	4/4	1/4
단기부동자금	372.2	384.4	390.3	390.4	395.6	405.2	414.5
(증가율, %)	(4.6)	(4.9)	(4.8)	(4.5)	(6.3)	(5.4)	(6.2)

자료 : 한국은행.

주 : 단기부동자금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MMF 등 금융 기관의 6개월 미만의 단기 금융 상품임.

④ 부동산 정책의 실패 : 부동산 시장의 투기화

○ (발단) 경기 하강세를 완화하기 위한 무리한 건설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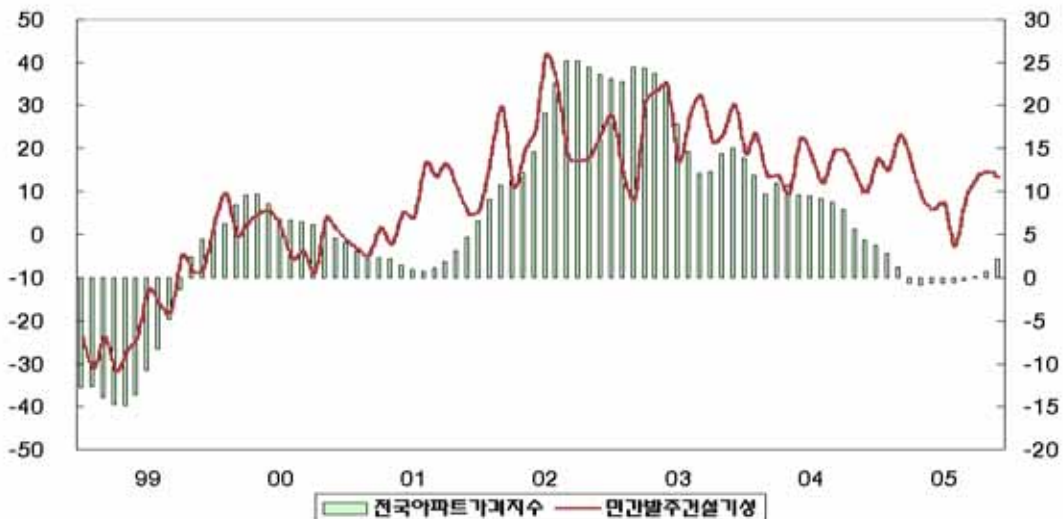
- 세계 경제의 동시 불황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000년 8.5%에서 2001년 3.8%로 급락함에 따라, 정부는 2001년 하반기부터 국민 임대 주택 건설,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함
- 이에 따라 건설 투자 증가율은 2000년 -0.7%에서 2001년 6.0%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5.3% 및 7.9%의 호조세를 지속함

○ (미흡한 정책 대응) '원인에 대한 처방(수급정책)'이 아닌, '현상에 대한 처방(투기 억제)'에 대해서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함

-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주된 내용이 주택담보비율 조정, 세무조사, 투기 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에 치중하여 근본적인 수급 안정 방안이 미흡함
- 그 결과 2000년 12월말 1.4%에 불과하였던 전국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2002년 12월말에 34.4%까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화가 급속히 진행됨

< 전국아파트가격 지수 상승률 및 민간건설기성 증가율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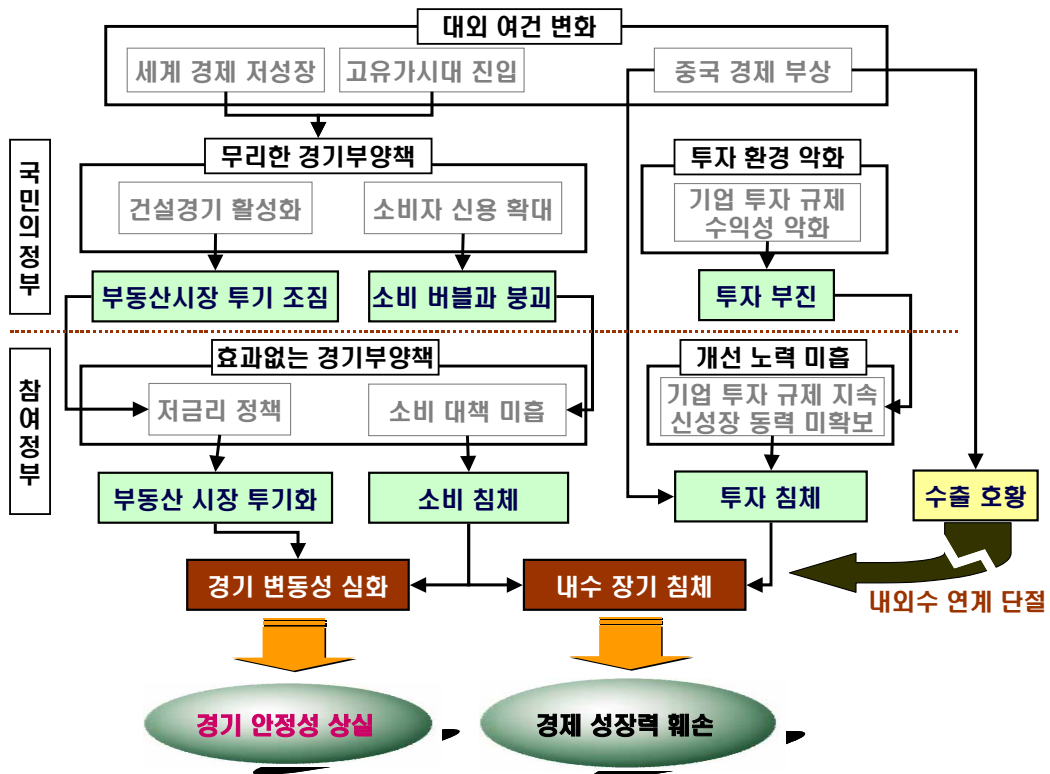
기말 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上
전국아파트가격지수 상승률	8.5%	1.4%	14.5%	22.8%	9.6%	-0.6%	2.1%
민간건설기성 증가율	5.4%	4.9%	24.7%	34.4%	22.2%	5.7%	13.3%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주 : 전국아파트 가격 지수는 2003년 9월 = 100 기준임.

3.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성격 규정

-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두 가지 특징인 성장력과 안정성 약화 현상은 급속한 대외 여건의 악화에 대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여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기 안정성이 상실된 1차적인 원인은 21세기에 들어서부터 시작된 선진 경제들의 동반 성장 둔화,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등 대외 여건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음
- 특히 한국 경제가 선진국들이나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경제 위축이 더 심했던 것은 높은 대외의존도, 내외수 단절,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경기 대책이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도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 가장 큰 부작용을 일으킨 정책은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투자활성화를 배제한 채 소비와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4. 정책 과제

(1) 성장 복원력 회복

○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 전략에 대한 再考

- 경제 발전 단계에 적합한 성장-복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 전략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우려가 존재
- 따라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분배 구조의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先성장 後분배’ 전략이 요구되며, 특히 복지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감내 수준을 고려하여 영국 노동당 정권 하에서의 ‘영국병’⁷⁾ 등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임

○ 성장 잠재력 확충과 소비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시급

- 시장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규제 완화의 건수보다 내용상에 있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권 의결권 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핵심 규제가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촉진 및 소비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됨

○ 실질적인 소비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 소비 회복의 우선적인 여건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이나, 이외에도 실질적인 조세감면책으로 소비 여력을 확충해주어야 함
 -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만 집착하지 말고 소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세 등의 조세 감면정책이 필요함
- 또한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개인 회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소비자 신용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7) 1974년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임금 억제 정책의 포기,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분배 우선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6년 9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IMF 관리 시스템으로 진입하여, 70년대 후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까지 기록.

○ SOC 부문 등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

-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단기 지출 확대 효과와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SOC에 대한 추경 예산 지출 정책도 요구(補論에 상술)

○ 대외 여건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운용이 요구

- 국제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에 주력하여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 심리의 위축을 막아야 할 것임
- 최근 비록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변동성을 완화하는 차원의 시장 개입이 필요함

○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실효성 확보

-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단기 부동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금융 상품의 확대 등 자본 시장 활성화 정책이나 적정 금리 수준과 내외 금리 차이를 고려한 통화 정책 등이 필요함
 - 다만 통화 정책상 유의할 점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경기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지역 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화 등을 통해, 미분양아파트, 미분양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경제·산업 구조의 개선

○ 내수 부문의 육성

- 제조 부문의 잉여 인력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안정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특히 물류, 유통, 금융, 통신, 교육과 같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조업 이상으로 부여하여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켜야 함

-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해외 소비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소득의 증가로 다시 환원되도록 레저, 관광, 교육 등 국내 서비스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 한편 수출 부문과 내수의 연계 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부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할 것임

○ 경제의 에너지 가격 민감도를 완화

- 에너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省에너지 산업 육성, 기술 혁신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신성장 동력 확보

- 기존 IT 산업 및 유통 물류 등 사업 지원 서비스업과 NT, BT 등 신사업 그리고 문화 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이를 위해서는 국내 R&D 투자가 더욱 증대되는 한편으로 국내외 기업의 A&D 시장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있는 국내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 산업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함

(3) 정치·사회 시스템의 생산성 제고

○ 효율적 시장 시스템 확립

- 지금 세계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가 보편적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정부 기능의 비대화를 막고 시장 기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국내 제도와 규정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 법치주의 확립

- 아울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내 정치·사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補論 > 추경 예산의 필요성 및 지출 방향

1. 2005년 추경 예산의 필요성

○ (필요성) 2003~200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 200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함
 - 내수 부진 지속 :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2.0% 및 3.0%에 그침
 - 수출 경기 둔화 우려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부문(통관 기준)의 증가율이 2004년 31.0%에서 2005년 상반기 10.8%로 급감함
- 하반기 정부 지출 재원 부족 : 그러나 상반기 재정지출은 계획치(100.2조 원)를 초과한 100.8조 원으로 하반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2004년 및 2005년도 재정지출 규모 >

(단위: 억 원)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계획
2004	87.5	71.6	159.1
2005	100.2	69.7	169.9

자료 : 기획예산처.

주 : 2005년 상반기 계획은 100.2조 원이었으나 실제로 집행된 실적은 100.8조 원임.

- **건전한 재정수지** : 한편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어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중 추이 >

(%)

	2000	2001	2002	2003	2004
선진국 평균	-0.1	-1.5	-3.3	-4.4	-4.0
미국	1.2	-0.7	-3.8	-6.0	-5.6
영국	4.0	0.9	-1.3	-2.5	-2.7
호주	0.9	0.2	0.1	0.4	0.5
한국	1.3	0.6	2.7	0.8	1.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2005년 추경 편성의 방향

- (잠재성장률 확충에 이로운 분야에 추경 예산 집중) 2005년 4% 성장을 위해 약 4조 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며, 추경 예산의 내용은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추경 예산 규모 산정** : 공공 기관(KDI,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경제성장률 3.8%를 4%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 5% 성장이 필요하며, 추경 예산은 약 4조 원 편성이 필요함

- 1조 원 추경 편성은 약 0.1%p 성장률 제고 효과가¹⁾ 있으므로 하반기 4.6%(연 3.8% 성장) 성장에서 5%(연 4% 성장)로 성장하기 위해선 약 4조 원이 필요함

- **성장잠재력 확충 부문에 역점** : SOC 투자, R&D 투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추경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4)의 분석 자료상의 수치임. 단 이 자료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2004년의 추경 규모와 GDP 전망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05년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